

대학의 정치적 해방

서울시내 모대학의 정문과 후문에는 다음과 같은 총장 명의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 전수를 위하여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적인 학내집회로 인하여 대학의 질서와 문화가 훼손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이를 바로잡고 대학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당국이 사전에 승인하지 아니한 각종 외부단체의 학내집회를 ... 금지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함께 한국 대학의 허상과 실상이 엮혀져 있다. 따라서 지금 허 한국적인 공고문이라 할 만하다. 만일 이것이 선진 외국대학에 게시된다면 공고문 게시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인구에 회자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러한 공고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대학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대학의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몸짓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학의 존엄과 권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특정 정치 집단이나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거에 다중을 동원하여 대학을 점거할 수도 있으며 그 순간부터 대학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그래도 대학은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으며 오직 공권력에 의한 원천봉쇄로 대학이 보호되기를 회구할 뿐이거나, 아니면 후유증과 재산손괴를 우려한 나머지 도리어 대학이 공권력의 원천봉쇄를 거부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유린당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공고문은 그 효과에 대한 정밀한 계산이나 확신도 없이 내다붙인 하나의 사회고발이며, 잠재피해자로서의 고발성 몸부림이라 할 것이다. 그 몸부림 속에는 정부와 이 나라 법질서에 대한 불신이 내재되어 있다.

위의 공고문은 대학에서 교육논리가 퇴색하고 정치논리와 힘의 논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오늘날의 학원사태는 장소가 학원일 뿐 본질적으로는 정치사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학의 정치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어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날로 저하될 것이며 교육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전국의 90여 개 대학에서 착수한 학부제는 대학당국과 교수들이 내놓은



전국대 총장 윤형섭

일종의 자기반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학의 학과 편제와 교육과정이 지난 수십 년간 경영자 중심, 교수 중심으로 편성 운영되어 왔던 것을 세계화, 국제경쟁력 제고, 교육개혁의 파도 속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형으로 개편하여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전공 및 교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여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폭넓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학부제의 발상근거이다. 학부제가 도입되면 대학은 경영적 측면에서, 교수는 신분면에서 각각 위험부담과 불안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이를 정치논리만으로 분석하며 혐의론으로 접근하여 저지투쟁을 연합적으로 전개하고 힘으로 억압하려 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 결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만다. 결코 학부제 발상 속에는 운동권 학생활동의 기반이 되는 학과를 해체하고 최소 전공인정학점제와 복수전공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응집 계기를 불식하겠다는 등의 저질적이고 정치공작적인 의도는 있을 수도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이것이 상식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나 교육논리와 발전구상의 결과물을 것처럼 정치적 음모론으로만 해석하는 한 대학은 지속적인 자해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대학을 정치논리로부터, 그리고 정치투쟁의 이용대상권에서 해방시킬 것이며, 순수한 교육개혁의 구상과 교육논리가 지배하는 대학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언제쯤이면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스승을 존경하며 학교의 제반 정책을 선의와 교육논리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언제쯤이면 모든 대학이 정치적 소용돌이로부터 의연히 해방되어 국가 백년대계에만 몰두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일, 이것이 우리 총장들의 어깨에 지워진 당면한 과제라 하겠다. 대학은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야 한다. 대학의 정치적 예속은 대학을 타락하게 하거나 불모의 동토로 전락시킨다. 대학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대학의 권위와 존엄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